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CONTENTS



제1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1

-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2
-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5

제2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19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0
- 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23
-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26
- IV.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55

제3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59

- I.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60
- II.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71
- III.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74
- IV.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78

제4부 기 타 83

- I. 각종 서식 84
- II. 심의 및 분쟁조정 시나리오 130
- III. 참고 자료 137
- IV. 부록(관련 법규) 144

제5부 교육활동 보호 Q&A 201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1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1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Q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며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가. 법률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속된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등’에는 위 학생과 보호자 외의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Q 동료 교원과 업무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의 의미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 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 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 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²⁾(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말한다.³⁾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교육부고시'라고 함) 제2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개괄

근거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유의점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교원지위법」은 형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로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유형별 개념 및 사례

1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8장)

직무를 집행하는 국·공립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⁵⁾를 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국·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찾아와 교원이 자신의 자녀를 차별 대우했다고 하면서 교원을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교실과 교무실 문을 발로 차고 교실에 침입하여 위협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유아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Q 학생이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반복하는 등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학생이 의도성을 지니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형법」 제2편 제314조)

사립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⁶⁾ 또는 위력⁷⁾으로 방해하는 행위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 사립학교의 학부모가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교무실로 들어와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겁에 질리게 한 뒤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5)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6)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7)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됨(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무고의 죄(「형법」 제2편 제11장)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⁸⁾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없음을 교내 CCTV로 확인 후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
- 학부모가 학생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Q1 신고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신고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또한,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Q2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로 나아간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4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편 제25장)

가. 상해

고의로 교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⁹⁾

-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원을 밀어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경우
- 수업 중인 교원의 손목을 물어뜯어 인대가 늘어난 경우
-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교원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 경우

8) 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함

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상처의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는 비록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2.25. 선고 99도 3910 판결).

나. 폭행

교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¹⁰⁾하는 행위

- 교원의 옷깃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 교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기 등 물건을 집어 던진 경우

Q 수업 중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교사 옆에 있던 교탁을 주먹으로 몇 내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교사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힘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교사 주변의 물건이나 시설을 내리쳐 놀란 경우라 할지라도 교사의 신체에 대해 힘을 가한 것은 아닌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5 협박의 죄(「형법」 제2편 제30장)

교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을 고지하는 행위

- 교원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밤길에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 교원의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 소화기를 집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교원을 교실에 가두겠다고 한 경우

Q1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원의 지도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 손목에 갖다 대면서 교사에게 “또 잔소리를 하면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겠다.” 라고 한 경우,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칼로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판 2010도14316, 대판 2006도2311 등 참조).

10) 유형력의 행사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Q2 교사에게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에 해당하나요?

교사에게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 행위의 범주 내에 해당하거나 상황 맥락상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관상 권리행사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따라서 교사에게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에 그친 경우로 해석되거나 발언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발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발언 자체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훼손 · 모욕)

가. 명예훼손

공연(公然)¹¹⁾히 교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어떤 학생이 학생, 보호자 등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Q1 학생이 자신과 친구 1명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교사에 대해 명예 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1인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도8155판결 참조).

Q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1) 공연(公然)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대판 2004도2880 참조)

나. 모욕

교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公然)히 표현하는 행위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년’, ‘○○새끼’ 등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이나 단체방에 교원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올려 유포하는 경우

Q1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나이가 몇 살이나, 몇 살인데 반말을 하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나?” 등과 같이 불쾌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모욕에 해당되나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7 손괴의 죄(「형법」 제2편 제42장)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 또는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교사가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Q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도 손괴에 해당되나요?

손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학생이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는 손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강제추행)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 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및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위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 전화로 전송한 경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Q1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반면,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함께 돌려 본 학생들도 있는 경우 같이 본 학생들은 잘못이 없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배포(반포)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제4항).

Q2 교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행위를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2024.10.16.)함으로써,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교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 이미지와 합성한 편집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행위의 유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행위를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4항을 신설(2024.10.16.)함으로써, 위와 같은 편집물 또는 복제물 등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의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 원격 수업 중 출석 확인을 위한 채팅창에 교원에 대한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Q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1회 받은 경우, 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법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문언 해석상 단 1회에 그친 경우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는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반복’하여 유통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시(대판 2008도4351 참조)한 적이 있다. 반면, 하루에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반복하여 발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구지법 2007노146 참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교원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

-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허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Q 보호자에게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음에도 내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하나 궁금하다면서 녹음이 안 되는 근거를 묻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¹²⁾이자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 및 처벌의 대상에 해당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참조).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고, 보호자의 경우 교원의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위 무단 녹음·청취 행위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참고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판결

- 1)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 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 나)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2)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11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학교 교육활동(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대한 보호자의 정당한 참여를 넘어서 교원을 괴롭힐 목적 또는 특혜 요구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 담임교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수업 내용, 교원단체 가입 여부, 출장 내역, 의무 연수 이수 내역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월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Q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하여 교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보호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보호자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1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보호자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항의하는 경우
- 보호자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모든 일을 교사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학교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교원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13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등¹³⁾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

- 신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주무르거나,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
-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교원이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교원이 볼 수 있도록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Q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유의점

-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적 언동과 구별됩니다.
- 「교원지위법」은 성폭력범죄 행위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바 그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시 준수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행위를 구별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안에 대한 전·퇴학 여부	형사처벌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	○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X	X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13)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1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적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적 판단과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담임교사에게 온전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방법의 변경 등의 대안적인 방법을 시도함이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¹⁴⁾
- 보호자가 “지각 처리하지 말라”,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해달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15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행동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지시 및 생활지도에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교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수업과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Q 학생이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면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모든 생활지도 불응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지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활지도에 대한 단순 불응을 넘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교원의 개별적인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16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원격 수업 중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독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교원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무단으로 SNS에 게시·배포한 경우¹⁵⁾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촬영물을 게임 개인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경우

17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에게 1:1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다른 침해행위 유형에 준하는 정도의 욕설, 폭언을 하였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참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법령과 고시에 따른 타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학교장의 판단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님

15) 이 경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교원의 수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배포에 이르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2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 IV.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I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교원과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은 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시기: 연 1회 이상
 - 학년 초 또는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방법
 - 1) 교직원: 각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주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의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회의 등 자체 연수, 중앙교육연수원 등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2)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실시
 - 3)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교원지위법 시행령」제21조)

대상	내용
교직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

가. 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슬라이드 5편)

대상	학생용 · 교직원용 · 보호자용	비고
QR코드		유초등 저학년용 - 게시번호 26번 초등 고학년용 - 게시번호 27번 중·고등학생용 - 게시번호 28번 교직원용 - 게시번호 29번 보호자용 - 게시번호 30번

※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subList/30300001643>)-교육자료

나. 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2편)

대상	교직원용 · 보호자용	비고
QR코드		교직원용 - 게시번호 31번 보호자용 - 게시번호 32번

※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subList/30300001643>)-교육자료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7편)

대상	학생용				학부모용		교원용
	유치원·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유치원·초등 학부모용	중·고등 학부모용	
QR 코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자료실-동영상자료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대상	카드뉴스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민원응대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QR코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자료실-교육자료

마. 2025 교육활동 보호 관련 안내 자료(4편)

대상	교직원용	비고
QR코드		교권보호 5법의 주요 개정 내용 - 게시번호 22번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 - 게시번호 23번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 게시번호 24번 교원보호공제 안내 - 게시번호 25번

※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subList/30300001643>)-교육자료



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 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시 유의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2)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 (4)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5)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과 결정 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을 단정 짓지 말고,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6) 교육지원청 사안조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가.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비밀누설 금지의무

● 신고의무(「교원지위법」 제28조)

- 「교원지위법」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보고의무(「교원지위법」 제20조 및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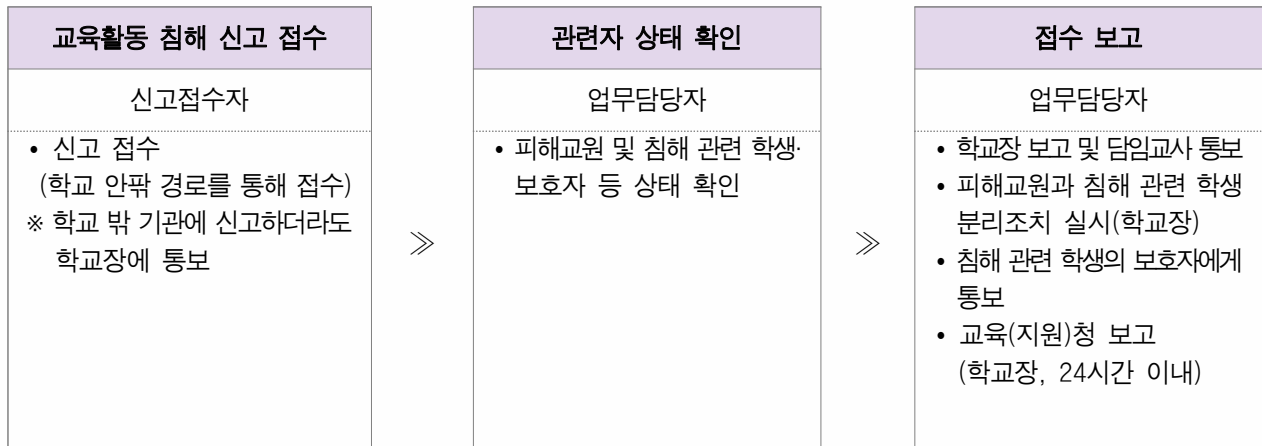
-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교육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 비밀누설 금지의무(「교원지위법」 제30조)

- 업무담당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업무수행 시 알게된 신고자 관련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신고 및 접수 절차



다. 신고 방법

- 학교 안
 - 업무 담당자,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 신고
- 학교 밖
 -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전화[평일 09:00~18:00])
 - 각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112 경찰청(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참고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 국어사전에 의하면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함. 이는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
- 자세한 내용은 72쪽 참고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시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사안 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안내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서식2]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1]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 보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발생 보고(5일 이내, 주말·공휴일 불포함, 학교→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서식3] 침해 관련자 의견서 [서식4] 참고인 진술서 [서식6] 사안 발생보고서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중대사안 발생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서식8] 중대사안 보고서 [서식9] 사안 조사보고서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상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신청한 경우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서식10, 10-1] 출석통지서 및 서면의견서 [서식11] 회의록 [서식12] 조치 의결서
	사안 종결 [교육지원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회복 및 치유 	[서식13-1, 13-2, 13-3, 13-4] 결과통지서 [서식14] 결과보고서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가. 피해교원 대응요령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학교 관리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¹⁶⁾
 - 침해 관련자와의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제출 [서식2]
 - 필요 시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 상담 지원 요청(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나.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사안 발생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 필요 시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 사안 신고
 -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 ※ 유선·구두 보고 또는 사안 신고서[서식1] 공문 제출
 - ※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으로 사안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유선·구두로 사안 신고하고, 추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6]’ 제출 시 함께 제출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학생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제반 상황 알리기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등

보호자 연락 시 참고사항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전달한다.
- 피해교원과 기타 관련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보호한다.
- 발생 사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하여 향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16) 「교원지위법」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원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신고서 [서식1] 작성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희망 시 필수 제출)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조퇴, 병가, 특별휴가,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안내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
 -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실시 및 연계 및 조언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상세 내용은 '제3부 I.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부분 참조
-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Q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사안 처리의 방향 및 원칙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였을 때, 관용적인 태도 지양,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은폐 금지, 상급 기관 의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를 받는 관할청에서는 보고 결과를 해당 학교나 학교의 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안 발생 보고(학교)

가. 피해교원 대응요령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필요 시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증거자료 제출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Q 심의를 통한 학생 조치보다 분쟁조정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 및 합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분쟁조정 전문가 '화해중재단'을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사안 접수 전 갈등 단계에서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협의 후 화해중재단이 학교에 방문합니다. 또, 교원보호공제를 통하여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불가합니다.

나.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파악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요청사항 확인

※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희망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침해 관련 학생의 평소品行, 과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침해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서식3], 참고인 진술서[서식4] 작성

※ 참고인 진술서 작성 시 사안 관련 당사자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작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서식6] 작성

• 피해교원 사안 신고서 제출 후 5일(주말, 공휴일 미포함)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교권 보호지원센터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6],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서식3], ‘참고인 진술서’[서식4]를 공문으로 제출

사안 발생 보고를 위한 사안 파악 과정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조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 문답시에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시 주의사항

(피해교원)

- 초기 상담 시 피해교원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 경청 및 적절한 위로와 지지
- 피해교원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 파악
-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보호조치 등 설명

(침해 관련 학생)

- 초기 상담 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침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
- 사안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해 주고,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침해 관련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조치수위에 대해 언급하거나 동조·반박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주의하여 반응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자녀(학생)의 침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방법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을 통한 진술에 대해 안내
- 침해 관련 학생 측이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교원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
-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궁통)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및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양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음
- 양 당사자, 참고인(목격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음



3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 필요시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등) 추가 면담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 허용 가능(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

● 쟁점 사안 확인 및 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점검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 추가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중대사안이거나 사안 발생보고서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장 방문 사안 조사

사안 조사 단계에서 주의사항

-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사안 발생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
- 사안 발생보고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추가 면담
- 중대사안이나 사안 발생보고서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 조사 실시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사
- 사안 파악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완료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음

● 중대사안 발생 보고(관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서식9]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추가적인 피해교원 ·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사안 조사 등을 통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실 판단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교육지원청)

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운영 개요

단계	세부 절차				
위원회 소집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 요청 →	위원장	소집통지 → → 출석통지	각 위원 각 당사자
심의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청 시 분쟁조정)	→	각 위원에게 제척, 회피 여부 확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 각 당사자에게 기피 여부 확인 →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조치 등	→ 진술 청취 질의응답 → 피해교원 보호조치
처분 · 통지	위원장	의결서 →	교육장	결과통지 →	각 당사자 학교장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진행, 조정 성립 시 사안 종료, 불성립 시 심의 개최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

- 안전 상정
-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 피해교원 요청 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사안 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위원회 소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발생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 조속히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연장 가능

*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 조사 과정 중 새로운 증거의 발견, 학사일정,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

※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이 접수된 후 소집기한을 경과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며칠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 이므로, 사안파악 및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집기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회의소집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에서 주의사항

- 교육장은 신고 받은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해 사전에 수립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을 제공하여야 함
- 사건별·관련 학생별로 사건을 세분화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출석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자 등을 병행하여 가급적 출석을 유도함
- 참석을 위한 경우 학생은 출석인정 처리, 교원은 출장 처리 가능
- 출석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진술도 거부 시 진술포기서를 받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김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의결

가. 심의 운영의 원칙

- 학생별로 사건을 나눠서 개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함
- 여러 학생에 대한 사건이라도, 각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각 학생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별도로 심의 의결하여야 함
- 한 학생이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 가능
- 다수의 학생이 한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심의 가능,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진술은 각 1회씩만 통합하여 진행하되 심의는 개별 학생의 침해행위의 경중을 따져 개별적으로 심의·의결

- A학생이 B교사와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B교사에 대한 행위'와 'C교사에 대한 행위'는 병합하여 하나의 조치 결정
- A학생과 B학생이 동시에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와 'D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는 구분하여 각 학생에 대해 별개의 조치 결정

나. 심의의 진행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의사항

-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보장
-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관용과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
-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책임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 교원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심의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학생이 사안에 대해 설명, 의견 개진 등을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Q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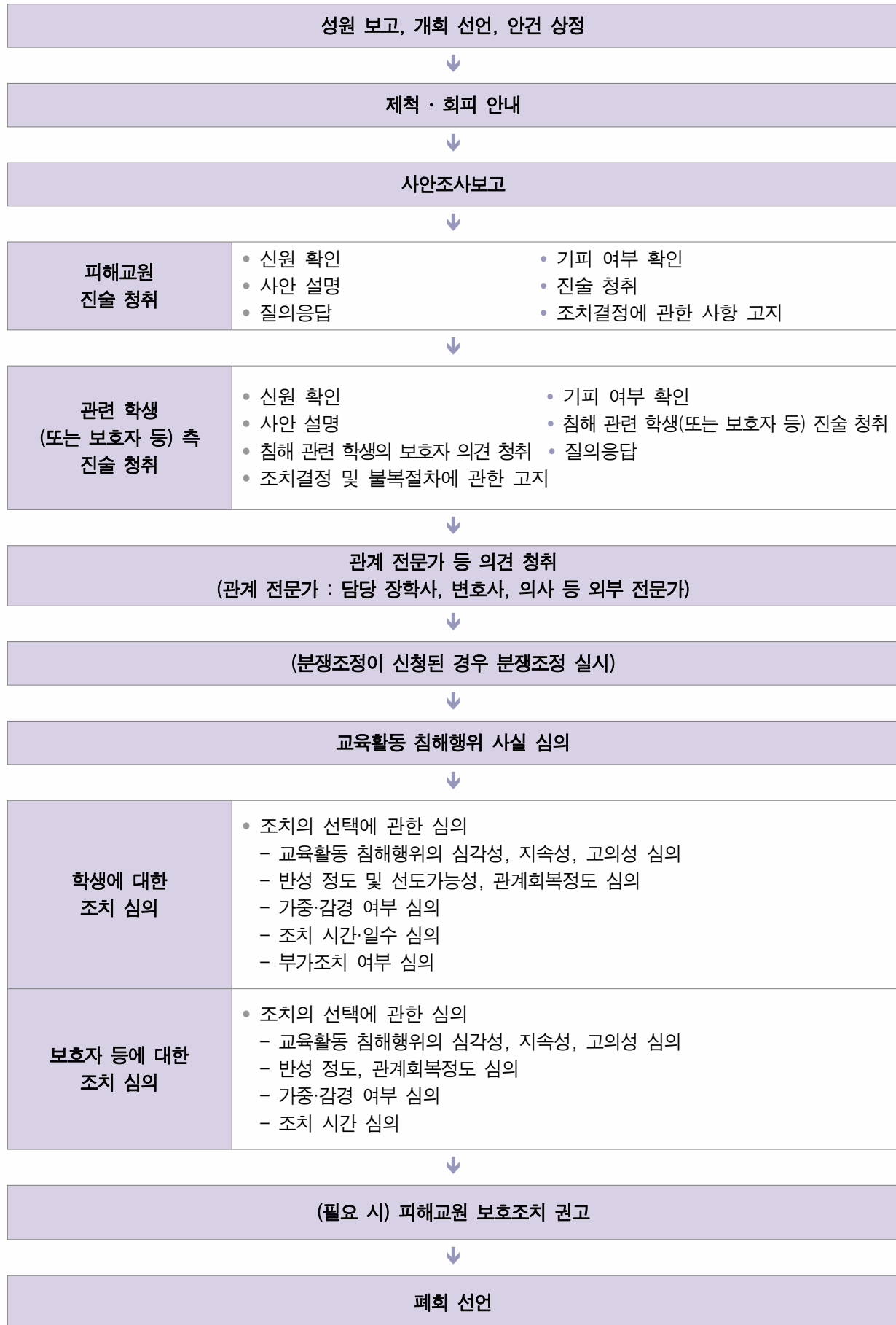
여기서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예를 들어 학생과 동거하는 조부모)을 말합니다.

Q2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은 행정절차에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개요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발생한 사안이 ①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해당하는지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인지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을

피해교원의 진술, 관련 학생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 각 당사자의 진술, 증빙자료, 참고인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문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 보호자 등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통해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함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으로 종결 가능함

1.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법률 자문

2.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 법률 자문

3.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의 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의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심의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률 자문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판단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임

2)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 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한다.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1)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3조에 규정된 [별표]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할 때

- 기본적으로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 추가적으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고,
- ②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참고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 배려

- 학생에게 조치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전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을 유념해야 함
- 운영절차 전 과정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

나) 합의 점수 도출

- (1)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각각 평가한다.
- (2) 각 기본 판단 요소의 합의 점수를 도출하고 만장일치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내지 않도록 유의)
- (3) 각 항목의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택한다.
- (4)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를 선택한다.
- (5)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를 함께 결정한다.
- (6)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하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도 함께 결정한다.

※ (특별교육) 조치 결과 통지서에 보호자 이수시간 명시(학생과 다르게 부여 가능)

(심리치료) 학생에게만 시수 부여(보호자 별도 시간 부여×, 보호자 동반·동행)

- 교육장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며(「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전학 조치를 시행한 학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전입교에 안내해야 함
- 출석정지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출석정지’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출석정지’와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하며,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되 세부 운영 방법 등은 학교 및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
 - ※ 학생의 연령, 가정 상황, 피해교원과 분리 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되, 원소속 교실에 잔류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 학년 진급 및 졸업예정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조치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함
- 교육장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 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사회 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전학 · 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다) 침해 학생 조치의 내용

(1)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및 사회봉사(제2호)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시간을 정하여 조치한다.
-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결정례]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교내 봉사 조치 결정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회봉사 조치 결정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사회봉사 8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2호)

(2)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단독으로 3호 조치만 결정**할 수도 있고, 1, 2호 조치에 부가할 수도 있으며, 4, 5, 6호에는 부가해야 한다.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시간을 정하여 조치한다.
-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참여 특별교육’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결정례]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 결정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3호) •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한 주된 조치로 교내봉사 조치 •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특별교육 이수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 제4항) •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2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3) 출석정지 (제4호)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일수를 정하여 조치한다.
- 출석정지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 참여 특별교육’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출석정지 일수에 제한은 없으나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목적상 적절한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학생의 출석 일수를 고려하여 유예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결정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주된 조치로 출석정지 조치 • 부가 조치로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출석정지 10일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심리 치료 3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 보호자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	---	---

(4) 학급교체 (제5호)

-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다.
- 학급교체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 참여 특별교육’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학생의 소속과가 제한적인 경우 등 학급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정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주된 조치로 학급교체 조치 •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학급교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5호) 및 특별교육 2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	--	---

(5) 전학 (제6호)

- 전학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 참여 특별교육’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

[결정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하면서 • 부가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전학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6호) 특별교육 이수 1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	---	---

(6) 퇴학 (제7호)

-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해당 학생이 학교 내에서는 더 이상 선도 교육이 어렵고 학교 밖의 대안적 교육 등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조치한다.
- 고등학생에 한하여 조치할 수 있다.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부가할 수 없다.



[결정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퇴학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7호)
----	--	--

(7)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에 대한 보호자 참여

- 보호자 참여는 학생의 조치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독립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¹⁷⁾
-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참여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미참여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4부 기타 1. 각종서식 [참고 3-1, 3-2] 활용)

(8)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

-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니나 학생의 행위가 학교 규칙 위반행위로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9) '조치 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맞으나 사안이 경미하여(기본 점수 0~ 4점이 나온 경우) '조치 없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치할 수 없다.**

[결정례]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행위가 <u>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u> 판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행위가 <u>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맞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학생 조치 점수가 0~4점이</u> 나온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조치 없음

[참고]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내용	'조치 없음'	'교육활동 침해 아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가능 여부	조치 불가	조치 가능
관련 교원 보호 조치 가능 여부	조치 가능	조치 불가
관련 교원 불복 가능 여부	불복 불가	불복 가능

17)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이수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해당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20구합1440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10)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는 학교규칙에 따라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각각 분리하여 조치한다.

Q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지도하였더니 이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경우 사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생활규정 위반행위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하여야 하고, 수업 중 이를 지도하는 교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분리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합니다.

3)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

보호자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한다.

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할 때

- 기본적으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 추가적으로
 - 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고,
 - ② 관련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나) 합의 점수 도출

- (1)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및 보호자 등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각각 평가한다.
- (2) 각 기본 판단 요소의 합의 점수를 도출하고 만장일치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내지 않도록 유의)
- (3) 각 항목의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택한다.
- (4)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를 선택한다.



참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 조치별 적용 기준

-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보호자의 반성 정도	보호자와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2호 ⇄ 1호

* 제1호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	0~4	조치 없음
1호	5~1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12~21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Q1 피해교원이나 침해 관련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변호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인(誤認) 신고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 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 양측의 의사를 서면 [서식7]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나요?

기본 판단 요소의 총점이 4점 이하이거나 기본 판단 요소 총점 상 학교에서의 봉사(5~7점)에 해당하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감경사유가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권고전학”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임의로 여기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Q5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감경사유인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학생의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장애”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Q6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심의 및 제재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신설하였으며, 그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보호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동일하게 법령에 따라 조사·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별 적용 기준’ 참고하도록 합니다.

Q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에 따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출결 특기사항 기재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안내해 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Q8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처분 관련 출결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부가조치·분리조치'에 대한 출결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미인정결석' 사유 등은 기재하지 않음)

구분	근거 법령	출결처리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출석 인정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1~3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미인정 결석
침해 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출석 인정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4) 회의록 작성

- 회의록[서식11]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포함
-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Q 피해교원,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교원지위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침해 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6 사안 종결 단계

가. 조치의 통지

-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치의결서[서식12]를 작성하여 해당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
 - 의결서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
 - 교육장은 위원회 조치 요청 후 14일 이내(「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 통지공문에 결과통지서[서식13-1, 13-2, 13-3, 13-4]를 첨부하여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에 서면으로 결과 통지
 - 학교장은 침해 학생(또는 그 보호자) 및 보호자 등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 학교장은 조치미이행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 ※ 처분 통지 90일 후 '미이행자' 명단 공문 보고 [참고4]

조치 이행 관련 사항 (학생)

침해 학생의 조치별 이행 내용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후	14일 이내	교육장 → 당사자 및 소속 학교	학교장 →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전학) 「교원지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 피해교원 보호 및 학생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이행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학교장은 학생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침해 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학교장 → 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	21일 이내	교육장 →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미이행 학생 명단 보고		30일 이내 이행 서면 안내

(학교장: 미이행 보고) 침해 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미이행 시,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에 공문 보고

(교육장: 이행 독려)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30일 이내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가중) 교육장 독려 후에도 미이행 시, 「교원지위법」제25조 제8항에 의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가중 조치 심의 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

조치 이행 관련 사항 (보호자, 보호자 등)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의 조치이행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후	14일 이내	교육장 → 보호자	학교장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90일 이내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을 이행토록 시간 및 장소 안내

(침해 학생의 보호자)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지위법」제25조제5항에 의거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시 90일 이내 이행토록 독려

(침해 보호자 등) 「교원지위법」제26조제2항제2호에 의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과 가능(90일 이내 이행)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 조치 불응/미이수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학교장 → 교육장	교육장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
		미이행 보호자 명단을 공문 보고	30일 이내 참여 서면 안내

(학교: 미이행 보고) 보호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90일의 다음날 등 보호자의 명단을 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에 공문 보고

(교육장: 이행 독려)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30일 내에 이수할 것과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교육장: 시도교육청 통보)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은 미이행자 명단 등을 도교육청에 통보

(교육감: 과태료부과)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대상 과태료 부과 가능



나.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심의결과 보고 방법 별도 안내
- 단, 중대사안의 경우 심의결과 즉시 보고

다. 후속조치(학교 및 교육지원청)

- 당사자가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
-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
- 조치결과에 이의제기 시 불복절차 안내

라. 보호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교육청)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은 이를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7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

가. 행정심판

1)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2) 행정심판의 대상

- 교원은 지역교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침해 학생(또는 그 보호자), 침해 보호자 등은 교육장의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학 및 퇴학 등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의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됨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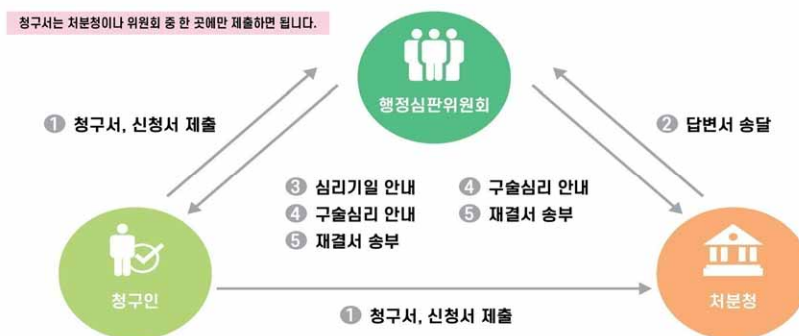
3)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4)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
-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 정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린 후 그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5) 절차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

1)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2) 대상(「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3)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4)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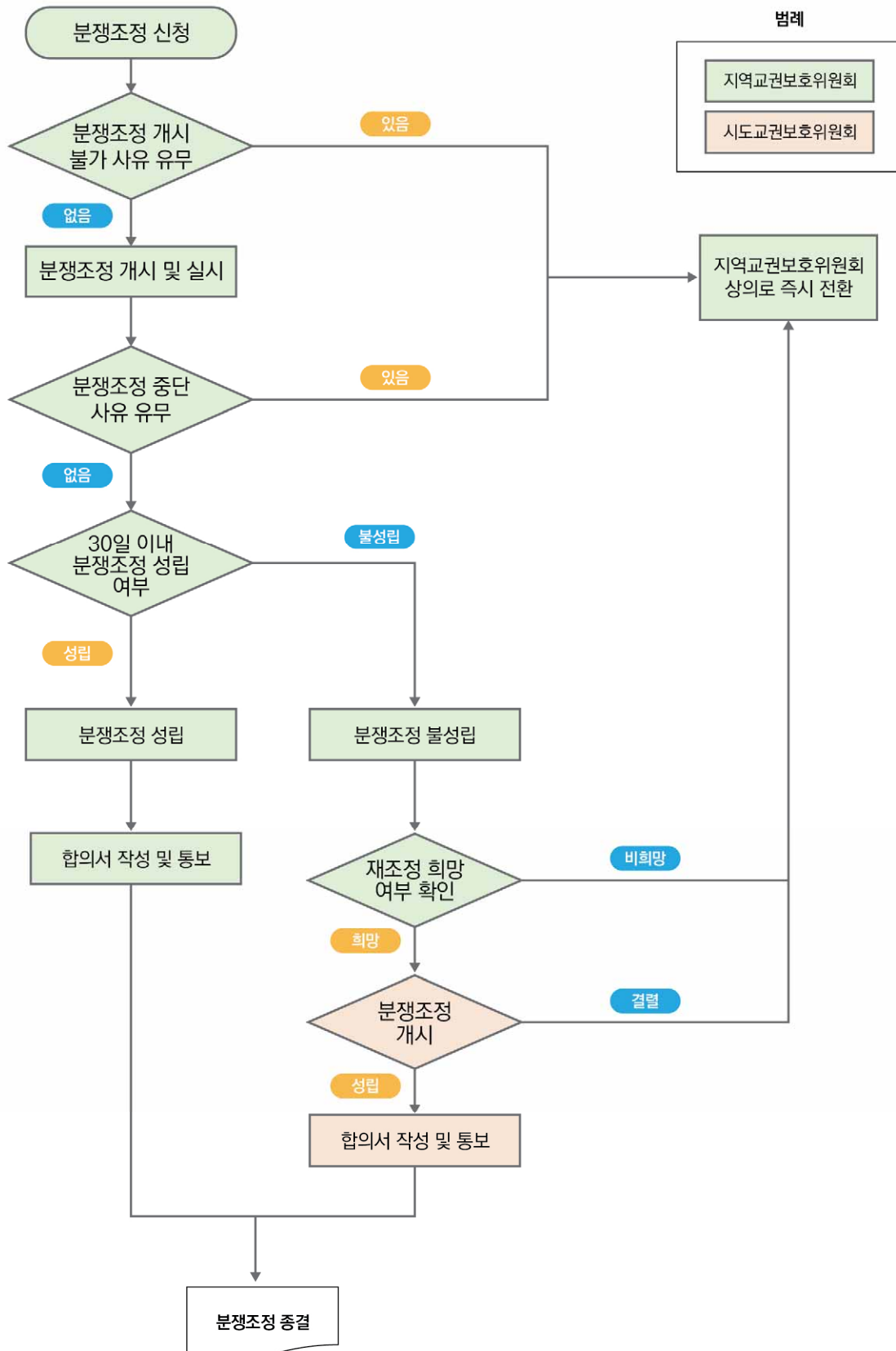
8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분쟁조정

가. 분쟁조정의 의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
- 당사자들의 분쟁상황 직면을 통하여 구체적 회복 방안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로 재발 가능성 감소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교육지원청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 특히 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용 가능



나. 분쟁조정 흐름도



다. 분쟁조정 절차 개요

절차	세부사항
분쟁조정 신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신고 시, 피해교원 분쟁조정 의사 확인[서식1] • 발생 보고 시, 피신고인 분쟁조정 의사 확인[서식3]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절차 안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식5]
↓	
분쟁조정 개시 (지역교권보 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지 • 출석 불능 시 분쟁조정 연기 신청 →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 필요한 경우 분쟁담당자 지정 또는 분쟁조정전문가(화해중재단 등)에 자문
↓	<p><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쟁조정 실시 (지역교권보 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조정안 제시 등 조정 노력 • 분쟁조정 협의록[서식16] 작성
↓	
분쟁조정 종결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서식15] 작성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당사자에게 합의서 통보 • (분쟁조정 불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불성립 통보 •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2차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안내[서식17] • 도교육청에 조정결과 보고

라.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2) 분쟁조정의 개시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3)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및 분쟁조정의 중지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분쟁조정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 가능
-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4) 분쟁조정의 실시

-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가능
- 진술 청취 후 양보·화해·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시도

5) 분쟁조정의 종료

①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
-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함
-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됨을 안내

(예시)〈합의서의 기재사항〉

1.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2. 조정대상 사안
3. 조정의 결과
 - 가. 합의 내용
 - 나. 미이행의 기준
 - 다. 미이행의 경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환 등)

②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분쟁조정 종료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 안내
- 재조정 희망 시,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행위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 권고 가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여부 및 조치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마.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유의 사항

- 1) 분쟁조정 시 기본 원칙 준수
 -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기
 - 답을 주거나 판단하지 않기
 - 당사자 간 오해/불일치되는 부분 확인하기
 - 사과 중용하지 않기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절차 준수
 - 개의 정족수, 제척 등 사유 확인 등
 - 분쟁조정 시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3) 분쟁조정 과정에서 인권침해(공개 사과, 사과문 낭독 등)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4) 분쟁조정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지 않으므로 관련 교원의 보호조치 및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음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 관련 교원이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조정 절차가 아닌 심의 절차로 진행
- 5)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시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 방지 약속 등과 약속 불이행 시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하여 합의 가능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주의사항

- 사안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 피신고인이 학생인 경우에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합의사항에는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가능
- 합의사항은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됨



IV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1 형사소송(고소 및 고발)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 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교육감의 형사고발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1) 피해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형사고발 요청서[서식18] 제출,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 2) 교육지원청은 피해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서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권보호팀으로 공문 접수
- 3) 피해교원의 고발요청서, 증거자료,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관할청이 고발 여부 결정

다. 유의 사항

- 1)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진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3)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4)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소·고발 대상 아니다 (「형법」 제9조).
- 5) 형사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 민사소송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 시 유의 사항

- 1) 소장에는 피고(가해자)를 특정(피고의 성명, 주소)하여 기재 후 법원에 제출한다.
- 2)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3)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진다.

3 소년통고제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방법

- 1)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기록한 통고서¹⁸⁾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하다.
- 2) 원칙적으로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다.

다. 특징

- 1)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3)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8)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라. 관련 법률 조항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3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I.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II.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 III.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IV.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I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가. 심리 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상담사를 통하여 전화 및 대면 등으로 심리 상담 지원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전화 응대 서비스
-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 전담 인력의 1차 응대 및 안내 후 관련 부서 연계 및 콜백,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교원의 어려움 해결
- ▶ 종합적인 지원 필요 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공제회 등 연계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밀착형 초동 대응

교육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사항 안내
-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공무상 병가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93호(2025.2.11.)]

-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6일 초과 시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공무상 요양 승인

- 국·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Q 공무상 요양승인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은 어떻게 하나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지원청 세부기준에서 정한 비정기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라. 특별휴가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 가능

교원지위법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83호, (2023.12.11.)]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을 분리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인지(발생) 즉시 사용이 적절

※ [예] 5월 1일 사안 발생 → 6월 1일에 특별휴가 사용은 부적절

- 피해교원 회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연속 사용이 원칙(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쪼개어 사용은 부적절)
-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5일을 부여·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특별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국 등 목적 외로 사용 금지
- 학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단, 객관성, 타당성 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가능

-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사안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특별휴가는 별건으로 사안별로 사용 가능

※ 학생별로 특별휴가 부여하는 것은 아님, 침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원인이 되는 침해행위가 같으면 동일 사안으로 간주하여 1회(5일 범위 내)의 특별휴가 부여 가능

Q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므로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을 보호 및 치유하기 위함이므로 사안 발생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라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보고서, 사안종결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특별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동일 학생 및 유사 사안 재발 시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할 경우에만 특별휴가 인정(동일 학생 및 유사 사안의 재발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필히 개최하여야 함)



Q4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공무상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무상 병가는 보다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 승인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결재한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나 연가로 정정합니다.

Q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교원에게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교권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또는 각 교육지원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심의 전에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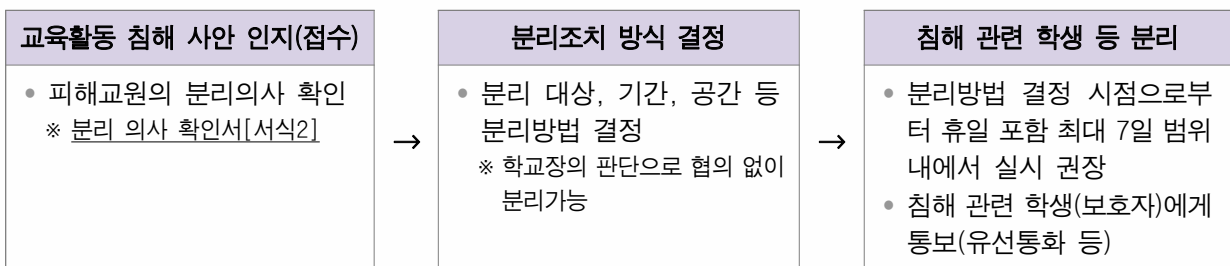
2 분리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가. 분리조치의 취지

-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완화에 목적이 있음

나. 분리조치 절차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다.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예 피해교원이 치유를 위해 특별휴가(또는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라. 분리조치 기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조치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 분리조치 시행 당일은 분리조치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도 분리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마. 유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조치 기간 동안 침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할 경우 분리조치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3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가.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의 보호조치 비용 우선 부담

- 피해교원이 치료비 등의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상: 관련 교원이 치료비 등 선지급 요청 시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부담 내용
 - 심리 상담 및 조언에 든 비용 및 치료비, 약제비
 - 선정 후 3개월 이내 상담 및 치료 시작, 1년 이내 상담 및 치료 종료
- 부담 범위: 1인당 150만원 한도에서 지급(1년간)
 - ※ 보호비용 대상자 선정 및 청구 절차와 방법 별도 공문으로 안내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치료 및 치료 요양에 사용된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치료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분쟁조정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조치 비용을 청구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더욱 철저한 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의 구상권 행사

-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하여 우선 부담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구상권 행사의 예외¹⁹⁾

1. 구상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보호자등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9)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 그 밖의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다.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 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의견 제출 방법 및 일정

- ①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
- ② 교육지원청 조사·확인팀은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안 확인
- ③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
-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²⁰⁾ (토요일·공휴일 포함)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20) 「교원지위법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의견 제출 흐름도



3)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

-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학칙(유치원규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나.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한다.

1) 구성

- (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법률 상담 및 연계(고문변호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권역별 화해중재단 내 변호사의 법률 상담

2) 방법: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내방, 홈페이지 등

3) 역할

● (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운영
- 언론보도, 중대사안 등에 대한 법적 지원
- 교원지위법, 교권보호조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검토 등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

- 권역별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 (도교육청 법무담당관 변호사)

-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고발, 수사, 소송) 시 기관 차원의 법률 자문 및 법무 지원
-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 추진
- 관련 부서(기관)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교직원법률지원담당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및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 초기 대응 강화: 해당 교직원 희망 시

- [수사 및 소송] 법률 상담 및 검토, 진행 절차 안내, 대응 방안 등 법률 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제공

● 직무 피소 시 수사·소송 지원: 소송비용 지원 대상·범위·금액 확대

-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 시 기관 차원의 형사고발 실시
-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긴급 사안 공동 대응 및 사례 공유



라.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강화

- 목적: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원 포함)
- 보상 범위

구 분	보장내용
손해배상금 및 소송제반 비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교원이 피소된 경우) ※ 검·경 수사단계 변호사 수임료 선지원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 분쟁조정 역할 수행(손해사정, 합의(금) 등), 1600-8787 안심콜 운영
물품 파손비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지원
위로금	- 교원이 강력범죄 또는 중대한 사안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로금 지급
긴급경호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시, 차량 지원 또는 경호서비스 지원
피해교원 치료비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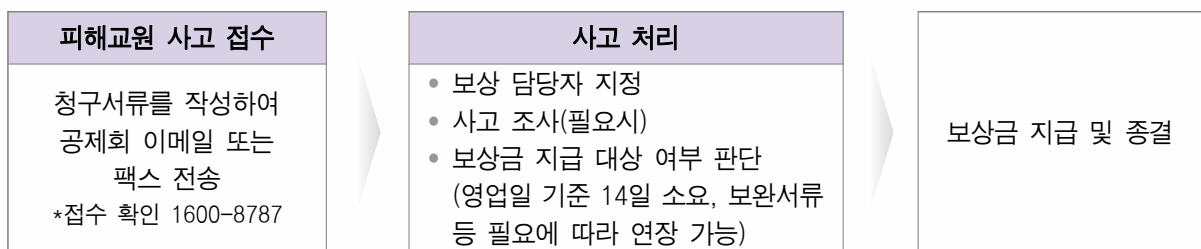
● 한도 금액

구 분	민 · 형사 소송제반 비용	민사 손해배상금
한도 금액	사고당 최고 7천만원 (벌과금 제외)	사고당 최고 2억 5천만원

● 청구서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사고 처리 절차



● 공제 관련 문의 전화번호

문의 전화	1600-8787
-------	-----------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2025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경기형 교육활동보호센터로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사안 통합 지원, 맞춤형 회복 지원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효능감을 증진하고 교원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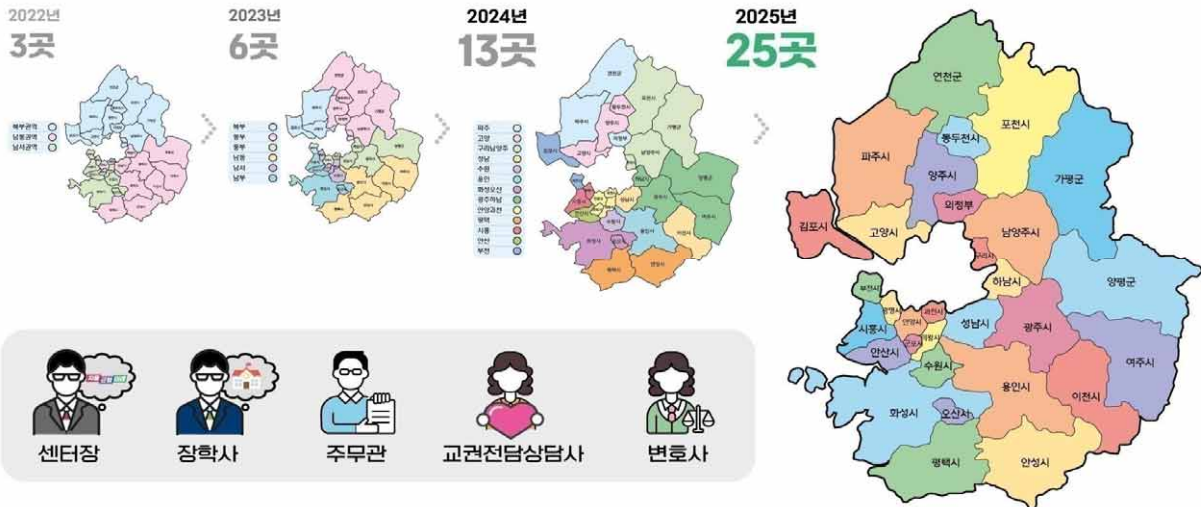
1 운영 개요

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확대 설치

- 1) 확대: 25개 센터로 전면 확대
- 2) 구성 : 장학사, 주무관, 교권전담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대 배치

* 교권전담상담사는 13개 센터에 배치, 권역별 피해교원 심리 상담 지원
** 변호사는 화해중재변호사로 배치.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업무 병행

3) 2025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현황



2 운영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 1)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 2)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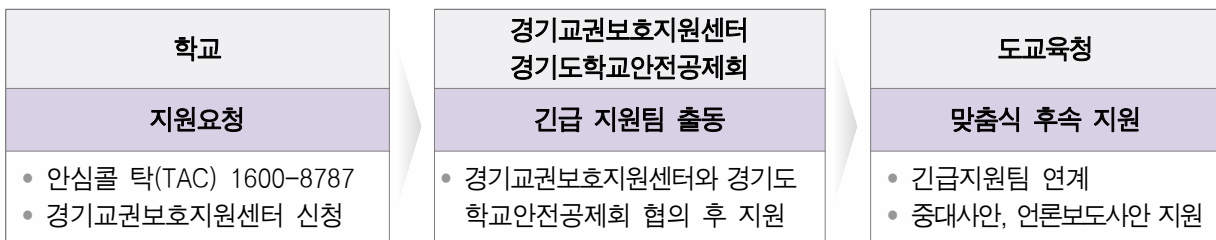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현장 지원

1)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및 침해 사안 밀착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통합 지원(행정지원, 법률 자문, 공제금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위하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이 한 팀이 되어 **학교로 방문하여 지원**하는 방식(상황에 따라 유선 지원 가능)

- 지원: 긴급 사안 초기 대응 및 현장 밀착형 행정·법률·심리 상담 지원
 - ※ 경기공유학교 및 온라인학교 수업 중인 교원 포함
- 구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한 팀으로 구성
- 방법: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경기도메신저, 홈페이지, 내방 및 학교 방문 등
- 절차



2)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한 침해 사안 상담

-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연계 운영으로 피해교원 중심 원스톱(One-Stop)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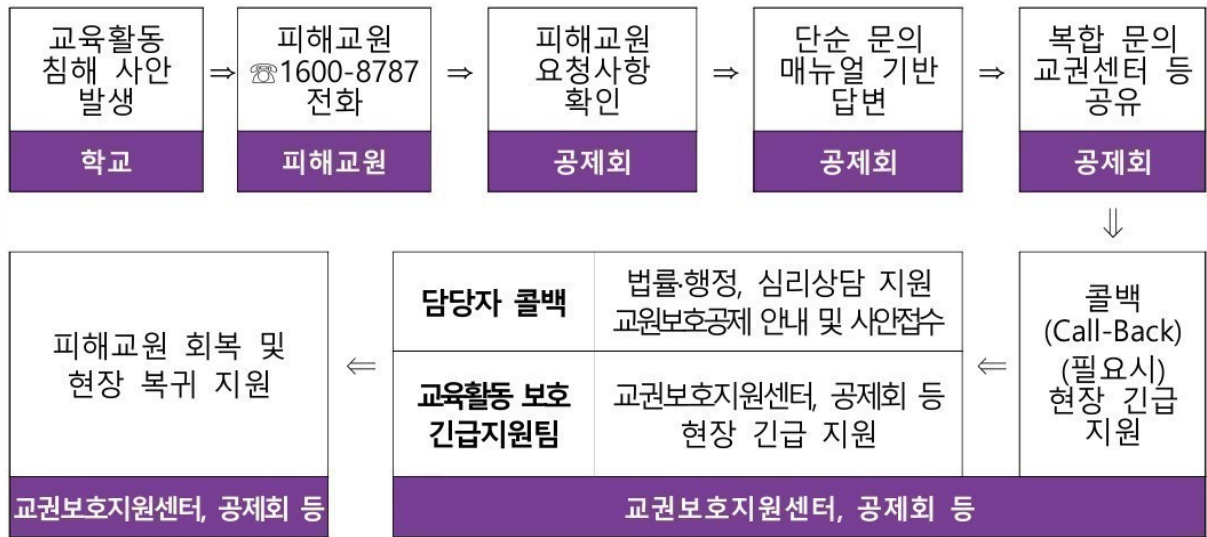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 국어사전에 의하면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함. 이는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

- 행정(장학사)-법률(변호사)-보상(공제회)-심리 상담(교권전담상담사)을 패키지화하여 교육현장에 종합적·입체적 지원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 전담 인력이 1차 응대 및 안내, 관련 부서 연계 및 콜백, 현장 방문 등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
- 종합적인 지원 필요 시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지원청, 공제회 등 연계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밀착형 초동 대응 강화



● 원스톱 지원 절차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교원 심리 상담 치유 지원 및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사례 관리
- 2)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사례 관리
- 3) 교원 대상 집단 상담, 힐링 성장, 힐링 심층, 센터 특화 프로그램 등 운영

Ⅲ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기능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 | |
|--------------------------------|---------|
|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 5) 학급교체 | 6) 전학 |
| 7)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적용 불가) | |

다.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마.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설치 및 구성

가. 설치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중 호선	<p>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년 (1회 연임 가능)
		<p>위원 해촉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최초(재) 구성 시 심의·의결 사항

- (의결안건)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보고안건)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²¹⁾ 등

● 소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	위원(장)	소위원회 역할	결과보고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장 1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함 •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가능 •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임 받아 심의·의결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결과보고

-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에 따라 학교급을 고려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접수 사안의 학교급을 고려하여 해당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21)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공동 운영

- 피해교원의 전보나 침해관련 학생의 전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복수의 교육지원청에 걸쳐있는 사안 처리와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다른 교육지원청과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공동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공동 운영은 의무는 아니나, 피해교원 및 침해관련 학생의 의견 진술과 청취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장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공동 운영은 피해교원 및 침해관련 학생 의견 진술과 청취의 과정은 공동으로 진행하되,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는 각각 진행함을 의미함

[운영예시] <학생> A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교사> B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 피해교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 간 협의에 따라 결정

3 운영

가.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처리 기한
①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사안발생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 조속히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²²⁾ 연장 가능 ²³⁾

22)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 조사 과정 중 새로운 증거의 발견, 학사 일정,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나.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척	회피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 회피 의무 ㉣ 위원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 회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당연 배제되므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출석요청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는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신청 당사자의 기피 신청 있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사유가 있는지 심의하여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 기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 기피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을 유지하여야 한다. 		

IV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1 구성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 공무원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위원의 제척 등 사유, 해촉 사유²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동일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2 심의·조정 사항 (「교원지위법」 제18조, 규정 제5조)

-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및 시책 수립
-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 라.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Q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피해교원은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의 소집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가. 회의 소집 사유

-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분쟁의 재조정

가. 분쟁 재조정 대상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개시하여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분쟁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당사자가 다시 한 번 조정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제도

나. 절차

1)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가) 분쟁의 재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서식17]를 제출한다.
- 나) 교육장은 분쟁조정 개시 거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조정신청서와 함께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로 제출한다.
-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불성립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분쟁조정 개시 거부·중지 사유

- 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다)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 기일 연기 신청

조정기일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일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다시 분쟁조정 기일을 정한다.

4) 분쟁조정의 종료

- 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5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가. 형사고발 요청 사안의 심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서식18]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안의 축소·은폐 금지의무 위반 여부 심의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축소·은폐 시 교원지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4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기 타

- I. 각종 서식
- II. 심의 및 분쟁조정 시나리오
- III. 참고 자료
- IV. 부록(관련 법규)

I

각종 서식

학교

- Q 서식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 Q 서식2**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 Q 서식3**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 Q 서식4** 참고인 진술서
- Q 서식5** 분쟁조정 신청서
- Q 서식6**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Q 서식7** 사안 종결 확인서
- Q 참고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 Q 참고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공문
- Q 참고3-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안내 공문
- Q 참고3-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학생용)
- Q 참고3-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보호자 등용)
- Q 참고4-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명단 보고 공문
- Q 참고4-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학생용)
- Q 참고4-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보호자 등용)



교육지원청

- Q 서식8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 Q 서식9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 Q 서식1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
- Q 서식10-1 서면 의견서(별지)
- Q 서식11 제○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Q 서식11-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 Q 서식11-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침해 관련자 소속 교육지원청)
- Q 서식1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
- Q 서식13-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학생용)
- Q 서식13-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보호자 등용)
- Q 서식13-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교원용)
- Q 서식13-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학교용)
- Q 서식1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
- Q 서식15 분쟁조정 합의서
- Q 서식1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
- Q 서식17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 Q 서식18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 Q 서식19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및 사안 처리 대장
- Q 서식2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 Q 서식2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 Q 서식22-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재통지서(학생용)
- Q 서식22-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재통지서(보호자 등용)

【서식1】 피해교원 →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2) 쪽 중 (1) 쪽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input type="checkbox"/> 즉시 분리 희망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 [서식2]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첨부			
목격자(참고인) 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분쟁조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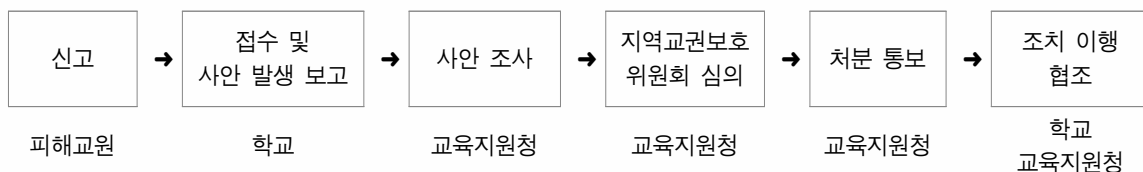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교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입증자료 (첨부서류)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	-------------------------------------

처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별지)

접수번호		접수일		(2) 쪽 중 (2) 쪽
------	--	-----	--	-------------------

※ 사안 내용 기록을 위해 필요시 활용

서식2 피해교원 → 학교장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함(「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는 가해 추정자의 의미임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20 년 월 일

피해교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서식3 침해 관련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침해 관련자	성 명		소속/ 학년/ 반	
	연락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주 소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p>※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p>		
목격자(참고인)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기타입증자료(첨부)		<p>※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자료명 기재 후 첨부</p>		
분쟁조정절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지 않음
보호자 성명		<p>※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p>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4 참고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성명		소속/ 학년/ 반	
	연락처		피해교원 또는 침해 관련자와의 관계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목격한 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5

양측 당사자 → 학교 → 교육지원청

※ [서식1] 신고서와 [서식3] 의견서에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조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양측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와 합의를 이끄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소속			
성명			
연락처			
양측 당사자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교원과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원과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취지 (요청사항)	※ 분쟁조정을 통해 바라는 사항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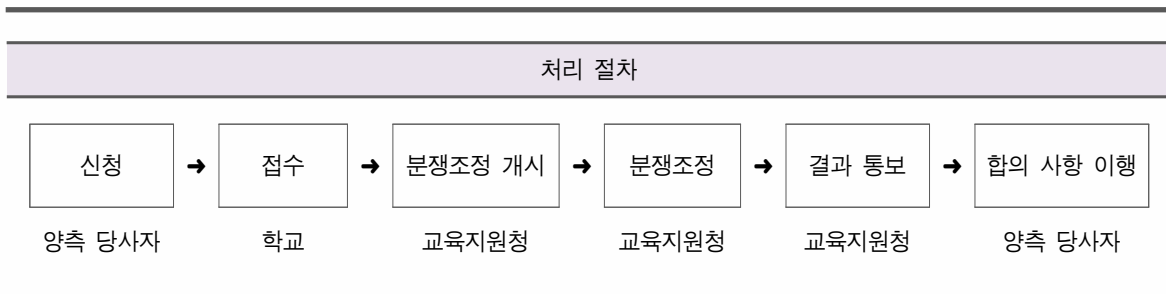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6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신고서, 의견서, 진술서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사용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 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신고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침해 관련자(학생) 의견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무·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상해·폭행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 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input type="checkbox"/>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input type="checkbox"/>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분리조치 시행유무	<input type="checkbox"/> 분리 <input type="checkbox"/> 미분리	
	미분리 사유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분리조치 (지도 담당자 등)	(기간) (장소) (방법)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침해 관련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분쟁조정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양측 모두 신청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학생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생 사안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이력 有*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일시) 20 년 월 일 (조치사항) 출석정지 0일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 타	
작성자: 직(교사) 성명 : 검토자: 직(교감) 성명 : 확인 및 보고자: 직(교장) 성명 :		

서식7 양측 당사자 작성

사안 종결 확인서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사안 종결 희망 사유	
기타 의견	
<p>2000년 00월 00일</p> <p>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p> <p>00학교장 귀하</p>	



참고1 학교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과

(경유)

제목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나. ○○○○학교-○○○○ (20○○. ○○. ○○) (※관련 내부 공문)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교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피해교원 임신 및 장애 여부	비고
피해교원	○○○○○학교	○○○	√	3-1 담임

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침해 관련자 장애 여부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	√	3-1 학생

-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6] 1부.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 1부.
 3.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의견서[서식3] 1부.
 4. 참고인 진술서[서식4] ○부.
 5. 기타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참고2 학교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취소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과
(경유)

제목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1. 관련: 개최 요청 공문 대호

2. 20○○. ○○.○○.에 요청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를 요청합니다.
가. 피해교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피해교원 임신 및 장애 여부	비고
피해교원	○○○○학교	○○○	√	3-1 담임

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침해 관련자 장애 여부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	√	3-1 학생

다. 취소사유: 오인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음 등

붙임 사안 종결 확인서[서식7] 각 1부. 끝.



참고3-1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안내 공문]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안내

1. 관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 대호
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조치를 미이행하여 불임과 같이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조치 결정사항	비고
학생	○○○○○학교 ○학년 ○반	○○○	학교에서의 봉사 9시간 특별교육 4시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시 교육지원청 보고 예정
보호자	○○○○○학교	○○○	특별교육 4시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시 교육지원청 보고 예정

불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 1부. 끝.

참고3-2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통지서(학생용)]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
(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6.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미이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예정입니다.



참고3-3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통지서(보호자 등용)]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
(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6.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미이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예정입니다.

4

기
타

참고4-1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명단 보고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과
(경유)

제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명단 보고

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제35조

나.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 대호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조치 결정사항	미이행 사유
학생	○○○○학교 ○학년 ○반	○○○	학교에서의 봉사 9시간 특별교육 4시간	단순거부, 연락두절 등
보호자	○○○○학교	○○○	특별교육 4시간	단순거부, 연락두절 등

붙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1부. 끝.



참고4-2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보고서(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학생용)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상기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조치 가중
및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참고4-3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보고서(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보호자 등용)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상기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서식8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2000. 00. 00.(0)>

☐ **보고 개요**

주요내용(요약)
❖

○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구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사안 내용** ※ 보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 (발생 일시/장소)
- ▶ (침해 내용)
- ▶ (진행 상황)
- ▶ (피해교원 조치)
- ▶ (침해 학생 조치)
-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개최 결과 :
- ▶ (기타 특이사항)

☐ **향후 조치 계획**

○

【서식9】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신고서, 의견서, 진술서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사용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 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신고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침해 관련자(학생) 의견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무·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상해·폭행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 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input type="checkbox"/>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input type="checkbox"/>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 관련 증거에 따라 조사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당시 옆자리에 있던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 □□,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B교사에게 “씨○”이라고 욕을 하였고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음 • A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B교사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 • 따라서 2025.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A학생이 B교사의 어깨를 밀치고 “씨○”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임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피해교원의 부상 정도는 가벼운 타박상(전치 2주)으로 경미함 • 해당 학생의 경우 이전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주의를 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 • 해당 학생의 경우 과거 교사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피신청인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휴대전화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피해교원에게 반감을 갖고 있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
	관계회복정도	• 학부모가 피해교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음 • 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없어 피해교원은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침해 관련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학생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생 사안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이력 有*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일시) 20 년 월 일 (조치사항) 출석정지 0일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 타	

서식10 교육지원청 → 양측 당사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 소	
안 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정 절차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안의 요지	<p>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p> <p>【※ 위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안으로 위 사안 개요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p>
참고 사항	<p>1.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p> <p>2. 출석하실 때는 안내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p>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00월 00일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p>	



서식10-1 별지

서면 의견서

구분	소속	성명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4

기
타

서식11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5-○○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 → 침해 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 조치 사항 심의]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합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항 논의]

[침해 학생 조치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결정 및 의결 내용]

•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 조치

연번	성명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유형	조치결정 (관계법령)	표결내용
1	○○○			만장일치
2				찬성(6), 반대(2)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피해교원	권고 사항	표결내용
○○○		

서식11-1 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5-○○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 → 침해 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합니다. 피해교원이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교육지원청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까지 함께 하고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 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공동 운영 종료]

간사 : 이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운영을 마칩니다. 이후부터는 각 지원청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항 논의]

[폐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피해교원	권고 사항	표결내용
○○○		

서식11-2 침해 관련자 소속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 △△교육지원청 2025-○○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 → 침해 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합니다. 피해교원이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교육지원청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까지 함께 하고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 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공동 운영 종료]

간사 : 이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운영을 마칩니다. 이후부터는 각 지원청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 조치 사항 심의]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합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침해 학생 조치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결정 및 의결 내용]

•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 조치

연번	성명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유형	조치결정 (관계법령)	표결내용
1	○○○			만장일치
2				찬성(6), 반대(2)

서식1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침해 관련자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피해교원 보호 권고 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2호)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성명	서명날인	직	성명	서명날인
소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이 유

1. 피해교사는 00학교 0학년 0반 담임교사이고, 학생은 00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교사의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건보고서 및 학생·피해교사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2025. 3. 11. 2교시 수업시간에 0학년 0반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교사가 학생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0년”, “씨0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교사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생에게 ‘학급교체(5호) 및 특별교육 이수(3호) 5시간’을 부과하고, 같은 조 5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2시간 참여’를 부과하기로 의결한다.

서식13-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용)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요일
------------------	-------------------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	--

조치사항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	--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 000이 2025. 0. 00.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교사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13-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보호자 등용)

소속	성명	비고(자녀 소속, 성명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요일
------------------	-------------------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	--

조치사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	------------------------------------

조치결정의 이유	보호자 000이 2025. 3. 5.부터 2025. 3. 31.까지 교사 000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자의 자녀 000가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아이가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우유를 중탕해 따뜻하게 해서 배식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 및 문자 메시지를 요구함. 학부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2호 나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13-3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교원용)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요일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침해 관련자 조치 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피해교원 보호 권고 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1호)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이 2025. 3. 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서식13-4 교육지원청 →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요일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침해 관련자 조치 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피해교원 보호 권고 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1호)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이 2025. 3. 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서식14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

피해 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구체적 행위 내용	(별지 사용 가능)				
교육 활동 침해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무·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상해·폭행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 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input type="checkbox"/>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input type="checkbox"/>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위원수	재적 명 // 출석 명	
분쟁조정결과		<input type="checkbox"/> 개시 거부/중지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 거부 <input type="checkbox"/> 고소·소송제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정 성립				
		<input type="checkbox"/> 조정불성립				
조치 사항	구분	성명	직위	조치 결정 사항		
	피해교원					
	침해 관련자					
	기타					
조치사항 통보		20 년 월 일()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사고소 (고소인: 예시 - 학생(보호자))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원고: 예시 - 학생(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재조정 신청 등)				
		작성자: 직(장학사) 성명 : 보고자: 직(교육장) 성명 :				



서식15

분쟁조정 합의서

신청인 1		신청인 2	
성 명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신청인1과 관계	
분쟁경위			
당사자의 의견	[신청인1]의 의견 요지 [신청인2]의 의견 요지		
조정결과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식16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예시)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관련 당사자 참석 유무	신청인1(피해교원)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신청인2(학생, 학부모 등)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신청인2의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p>• 회 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2. 당사자 참석여부 확인 3. 조정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4. 분쟁조정절차의 목적, 진행 순서, 주의사항 전달 5.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6. 조정합의서 작성 7. 폐회 			
<p>•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p> <p>[참석위원 명단]</p> <p>[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p> <p>[분쟁조정의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p> <p>[당사자 의견 청취]</p> <p>[질의응답]</p> <p>[조정안의 권고]</p> <p>[조정 성립시 분쟁조정합의서(서식15) 작성]</p> <p>[조정불성립된 경우 심의절차로 진행]</p> <p>[심의이후 절차 안내]</p> <p>[폐회]</p>			



서식17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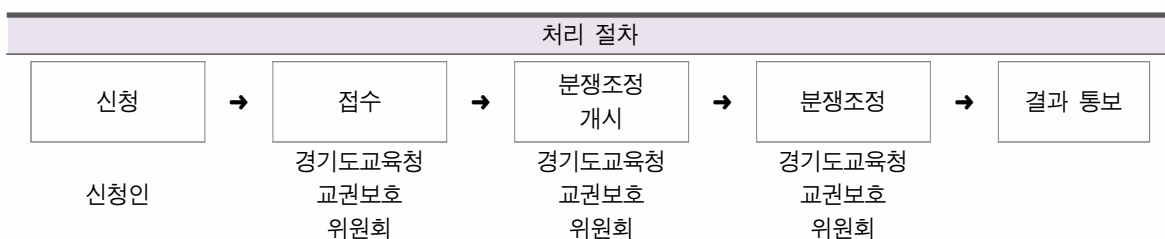
	신청인1	신청인2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요청사항)		
신청원인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00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18】 교육활동 침해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피해교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의 형사고발을 요청합니다.

구분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인			
침해 관련자	학생명		
	학생 보호자명		(피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보호자 관련 사항 함께 기재)
사안의 요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형사 고발 요청 이유			
첨부 서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19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신고 및 사안 처리 대장

순	피해교원 인적사항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내용	요구서 접수일	사실 조사 기간	위원회 개최일	의결 내용	조치 결과	결과 통보일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 ○						
							○ ○						
							○ ○						

- ※ 내용 란에는 사안 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 구분 란에는 학생, 학부모 등 기입
- ※ 결과통보일은 피해교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한 날짜
- ※ 의결 내용에 분쟁조정 결과도 포함하여 작성

서식20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연락처	근무처		연락처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2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서식22-1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보고서(학생용)]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재통지서 (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6. 조치이행 완료일: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학생) 대상자가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의거하여 가중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학생의 보호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식22-2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보고서(보호자 등용)]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재통지서

(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6. 조치이행 완료일: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보호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II

심의 및 분쟁조정 시나리오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나리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 사)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p>(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안건 상정	<p>(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p>
제척·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주의사항 안내	<p>(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사안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생이 수업 중이던 A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B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div> <p>(간 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p>
쟁점사항 확인	<p>(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질의 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진술	(위원장)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시고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관련자 진술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 관련 학생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진술)
	(위원장)	네. 성실히 응답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 퇴장>
	(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입장>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학 생)	저는 ○○○입니다.
	(보호자)	저는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입니다.
관련자 진술	(위원장)	(기피신청 안내,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관련자 진술	<p>(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보호자) (마지막 진술)</p> <p>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학생과 보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위원장)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퇴장></p>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	<p>(위원장) 지금까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p>(위원장) 먼저, 양측의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위원들 상호간 논의)</p> <p>다음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한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기재출한 증거자료 및 오늘 청취한 진술자료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들 상호간 논의)</p> <p>(위원장)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및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장) 이어서 인정되는 사실 관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p> <p>(위원장) 해당 사건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교원지위법」 제19조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p> <p>(위원장) (*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종료)</p>
관련 학생 조치 심의	<p>■ 기본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자료 제공)</p> <p>(위원장) 먼저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심각성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p> <p>(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위원장)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 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침해 학생 반성 정도 1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1점, 총 11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4호 출석정지에 해당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 추가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합니다.</p> <p>(위원장) (* 간사는 추가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 보고)</p> <p>(위원장) (* 가중·감경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경·가중 여부 의결)</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관련 학생 조치 심의	<p>(위원장) 본 사안의 경우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출석정지로 의결한 경우 출석정지 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정지 일수에 관하여 위원 상호 의견 개진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일수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관련 학생 부가 조치 여부 심의	<p>(위원장) 다음으로 부가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 선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가조치 여부 및 시간 의결></p> <p>※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하며, 보호자의 특별교육 참여시간도 의결함 ※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조치 시 반드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해야 함 ※ 전학조치의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p> <p>(위원장)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관련 학생 조치 최종 의결	<p>(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권고	<p>(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해당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p> <p>(위원 1) 피해교원 ○○○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한다.) (의사봉)</p>
폐회 선언	<p>(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2 분쟁조정 시나리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 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 사) 반갑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지원청 제○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조정할 안건은 사안번호 20○○-○○,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사안 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C학생의 아버지/어머니인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D학생과 E교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B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p> <p>(※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div> <p>(간 사) A교사가 ○월 ○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B 학부모도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p>
질의 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분쟁 조정	(위원장)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양측 당사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양측 당사자 입장>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A) 저는 ○○○입니다.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B) 저는 ○○○입니다.
	(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 중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
	(교원A) (학부모B) 없습니다.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의견 및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쟁 조정 성립	(교원A)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B) 이번 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 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선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양측 당사자 동의>
	(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분쟁 조정 성립	(위원장)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측 당사자 퇴장>
분쟁 조정 성립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분쟁 조정 불성립	<p>(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선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부동의></p>
	<p>(위원장)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봉)</p> <p>양 당사자가 다시 조정을 원할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심의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조정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당일 심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경우)</p> <p>(위원장)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추후 심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경우)</p> <p>(위원장) 금일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인하여 추후 심의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재개최하겠습니다. 심의 일정은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모두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p>
	<p>(위원장)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서식17]를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재조정 일정에 관한 안내는 추후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퇴장></p>
	<p>(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Ⅲ 참고 자료

차 례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2] 과태료 부과 절차

[3] 과태료 부과 안내(예시)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²⁵⁾

경기도○○교육지원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5) 본 규정은 예시로서,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 시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사안이 복잡하거나, 학사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피해교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에게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6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 ④ 각 소위원회의 재적인원은 소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다.
- 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⑥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의 요지, 결정사항, 포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피해교원의 전보, 침해 관련 학생의 전학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복수의 교육지원청에 걸쳐 있는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간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기한 내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조치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한다.
 ② 교육장은 조치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결과 통보서를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에게 송부하고, 해당 학교에 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분쟁조정) ① 분쟁조정은 양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가능하다.
 ③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④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하거나, 재조정 희망 시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제12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사항의 위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 ⑥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학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내부결재가 있을 때(2025. 3.)로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 부과 절차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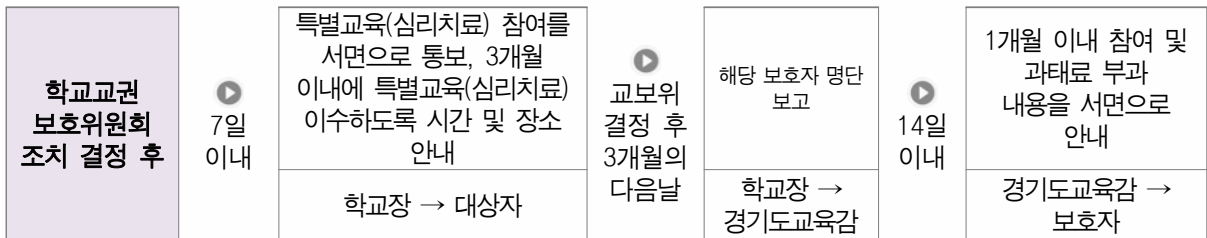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침해 학생의 보호자
-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조치를 받은 침해 보호자 등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후 14일 이내 대상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서면 통보
- 대상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 대상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 날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 명단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1개월 이내에 참여할 것과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



침해 학생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심리치료)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경기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대상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심리치료)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
 - 경기도교육감은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증을 제출한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대상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과태료 재판 진행)
 -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의무는 유지됨



3 과태료 부과 안내(예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1. 보호자 등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의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교원지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2호)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등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관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원지위법」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4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100	150	300

2025. 00. 00.

○○○○ 학 교 장

IV

부록(관련 법규)

차 례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 교육기본법(일부)
- ➔ 초·중등교육법(일부)
- ➔ 유아교육법(일부)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일부)
- ➔ 교육공무원법(일부)
- ➔ 형법(일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일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일부)
-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 ➔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 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를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이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 개정·시행 예정 법령 [법률 제20723호, 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5. 8. 1]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5. 1. 31.>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침해 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3. 9. 27.>]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23. 9. 27.]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2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칙 <제1973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중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육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18조로 이동 <2024. 3. 26.>]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2024. 3. 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26.>]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26.>]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6.>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3. 26.>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24. 3. 26.]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본조신설 2024. 3. 26.]

[중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26.>]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2조의4에서 이동 <2024. 3. 26.>]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 3. 26.>]

제2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 <2024. 3. 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 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본조신설 2024. 3. 26.]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0.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3. 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26.>]

부칙 <제3432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8. 30.]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0호, 2024.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조치 또는 1호·2호 부가 조치 가능 - 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의무

※ 감경 및 가중 여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해당 조치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17~21 퇴학

[전학 · 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 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교육기본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개정·시행 예정 법령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 1. 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 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⑦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5. 7. 22.] 제14조

부칙 <제20562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 개정·시행 예정 법령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5. 6. 21.] 제20조의2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부칙 <제19740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부칙<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형 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본조제목개정 2017.12.12.]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목개정 2024. 10. 16.]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5.19] [[시행일 2020.6.25.]]

부칙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²⁶⁾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802호, 2023. 10. 1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2.28.>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26)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 일부가 상이합니다. 추후 개정 예정입니다.



- ③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한다.<신설 2023.10.11>
-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개정 2023.10.11>
-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 ③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 ⑤ 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 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학교민원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심리 상담 및 조언
 - 2. 법률상담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에 의한 조치나 고발의 경우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감에게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5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교육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제4호, 제5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1. 각급 학교와의 직통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 구축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시 관련 소송 전 변호사 동행, 소송준비 등<신설 2023.10.11>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제5조의4(학생 분리교육) ①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10.11>

③ 교육감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④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제7조(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창구 일원화 방안
3.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4. 민원 처리 시스템의 온라인화 계획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6. 민원 및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 마련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0.11]

제8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감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컨설팅<개정 2023.10.11>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개정 2023.10.11>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신설 2023.10.11>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3.10.11>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10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출결 서류 등 종이 문서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11조(실태조사 반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교육감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③ 교육감은 단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9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04.07>

부칙 <제7802호,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²⁷⁾

[시행 2019. 12. 31.] [경기도교육규칙 제856호, 2019. 12. 31., 제정]



경기도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상담받고자 할 때는 교권보호담당부서나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하여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요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 일부가 상이합니다. 추후 개정 예정입니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856호,2019.12.3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²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 비용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해교원”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 등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치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교권보호 담당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속 담당부서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 부담의 제한 여부 및 범위
2. 제7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의 제기 여부
3. 제8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예외 사안 여부
4. 기타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 이외의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은 경기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제한) ① 피해교원이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보호조치 비용 청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중복청구 또는 부당 청구된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8)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 일부가 상이합니다. 추후 개정 예정입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피해교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 행사의 통지 등) ①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구상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구상금 납부통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1회 이상 납부를 촉구할 수 있다.

제7조(소의 제기) 교육감은 보호자등이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상금의 액수, 보호자등의 변제자력, 소제기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구상권 행사의 예외) 영 제2조의3제2항제2호의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상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3.1.20.>
2.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보호자등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²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외부위원은 관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 등) ① 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안의 「교원지위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보호 담당부서는 제1항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및 관련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 및 내용 일부가 상이합니다. 추후 개정 예정입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소속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의 장은 조정신청서를 포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서류 일체를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을 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2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 3. 28.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 4.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교육활동 보호 Q&A

I

교육활동 보호 Q&A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업무상 참고자료입니다.
- 2025. 02. 현재의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례

- 교권보호책임관과 업무담당자의 역할 [질문 01~02]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및 대응 [질문 03~21]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질문 22~26]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질문 27~43]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질문 44~47]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질문 48~68]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 조치 [질문 69]
-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불복) [질문 70~73]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질문 74~77]
- 피해교원 보호조치 [질문 78~84]
- 기타 [질문 85~89]



주요 용어의 간략한 표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



Q 질문1 교권보호책임관(교감, 원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를 갖고,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합니다.

- ▶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으로 2차 피해 방지, 사실이 왜곡·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 ▶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 ▶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
- ▶ 피해교원 보호조치: 관련(침해)자와 분리, 상담 및 안전 조치(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등)
-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

Q 질문2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역할을 담당합니다.

- ▶ 사안 내용, 시기, 관련자(학생인 경우) 등 조사 지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전화 연락 지원
-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
- ▶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후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신고, 5일 이내(발생일 제외)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침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침해 보호자 등 조치 이행 독려

Q 질문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은 언제, 어디로 보고하나요?

-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24시간 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신고를 합니다(유선 · 구두 보고 또는 사안 신고서 공문 제출).
- ▶ 5일 이내(주말, 공휴일 미포함)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발생보고서, 신고서, 의견서, 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Q 질문4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된 사안은 모두 발생보고 하나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으로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합니다.

Q 질문5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심의 등 이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로부터 사안 종결 확인서[서식7]를 받아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Q 질문6 시간제 강사, 방과후 강사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공,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하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치는 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2조). 다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도 및 교육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질문7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기한이 있나요?

관련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억이 희석되기 쉽고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진술 확보 등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질문8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인지한 경우 바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교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교원이 명시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안 처리 의사를 표시한 경우(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 제출)에 관련 절차를 개시합니다.

Q 질문9 피해교원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신고만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학교는 피해교원에게 사안을 확인하여 보호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사가 있다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Q 질문10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한 경우라도 학교장이 재량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7조). 따라서 학교장은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접수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질문11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재량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라면 피해교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Q 질문12

피해교원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침해 학생의 해당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 행위'라면 피해교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의 유형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근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피해교원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내부결재로 득하여 둡니다.

Q 질문1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사안인지 여부를 별도로 논의해야 하나요?

신고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되는 것이므로 관리자나 업무담당자가 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거나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질문14

다른 학교 소속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를 본인 소속교로 제출하고, 소속교는 사안 발생보고서[서식6]를 작성하여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합니다.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 소속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같다면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 소속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라면 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이 주관으로 침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때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의 의견 진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까지 함께 하고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피해교원에 관한 보호조치 사항, 침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각각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합니다.

Q 질문15

피해교원이 여러 명인데 피해교원 중 일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원하지 않는 피해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사안 종결 확인서[서식7])를 작성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교원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합니다.

Q 질문16

동일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침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피해교원이 침해 학생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동일한 사안이므로 침해 학생 일부에 대하여만 절차진행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 학생별로 가담 정도나 피해교원과의 관계회복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각 침해 학생 조치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Q 질문17 동일한 침해 학생이 동일한 교원에게 수일에 걸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사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동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하나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질문18 침해행위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척이 가능한가요?

신고된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문자, 화면 캡처 등)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침해자 불특정 또는 침해자 성명불상 등으로 표기하여 진행).

Q 질문19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했을 때 침해 학생을 피해교원과 분리조치할 수 있나요?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분리조치)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 경우 분리된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

Q 질문20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접수할 때 목격자 진술 등은 직접 받아서 내야 되나요?

피해교원이 직접 동료 교사로부터 목격자 진술서를 받거나 지도 대상인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경우 진술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서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질문21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현장을 녹음 내지 촬영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의 녹음, 촬영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성권 및 초상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제3자의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Q 질문2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안내는 어떻게 하나요?

회의 개최 안건, 회의 날짜, 장소 등을 문서, 구두, 유선, 교원위원인 경우 메신저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Q 질문2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당사자들에게 회의의 참석안내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들에 대한 회의의 참석안내 통지는 행정절차상 중요한 사전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침해 학생, 보호자 등의 침해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원인이 되는 사실의 요지 등에 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전통지가 되었다는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 등의 수단을 보충적으로 이용하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Q 질문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하나요?

참석 안내 통지서는 사전통지 절차의 일부로서 당사자가 미리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파악한 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참석 안내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질문2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통지를 하고자 하는데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와 실제 보호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학생의 각 보호자와 미리 협의하여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누구에게 안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거나 보호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쪽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Q 질문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나요?

피해교원 또는 침해자에게 참석안내와 불출석하더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사전 통지 절차를 통해 의견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면 관련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질문2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나요?

위원장도 위원이므로 의결권이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Q 질문28 위원장에 대한 제척 등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3조제3항).

Q 질문29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란 무엇인가요?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로써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³⁰⁾에서 준용되는 제13조³¹⁾ 참조).

- ▶ “제척”은 심의위원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법령상 당연히 심의에서 배제되는 경우이고,
- ▶ “회피”는 심의위원이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 집행을 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기피”는 심의 당사자가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의 방법으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질문30 제척 사유가 존재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안 심의에서 당연 배제됩니다. 심의위원의 회피 신청의 경우 회피 사유(제척 사유와 동일)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사안 심의에서 배제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척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위원 출석에서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위원은 출석에서 제외하므로 개의 정족수를 계산하여 나머지 위원들의 출석을 독려해야 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0) 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31)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Q 질문31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사자는 기피 사유를 소명하여 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피 요청된 위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 과반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Q 질문3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총 6명인데 그 중 4명에 대하여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피 신청된 위원 중 1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기피 사유를 심의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피 신청된 각각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피 결정 결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과반수 찬성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한 후 타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등 보완한 이후 재개최하여야 합니다.

Q 질문33 기피 결정이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재적 위원이 7명인데 6명이 출석하고 그 중 2명에 대하여 기피 결정이 된 경우 심의 의결이 가능한 위원은 4명입니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유지가 가능한 수 이므로 심의 진행이 가능하고 이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Q 질문34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의 목격자(참고인)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의 목격자(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참고인)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질문35 사안의 목격자가 아닌 교직원이 침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또는 피해교원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안 관련 당사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법률대리인, 위원,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Q 질문36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리 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유의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Q 질문37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 가능한가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별 사안 심의에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심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질문38 사안의 당사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안 관련 당사자, 침해 학생의 보호자, 위원,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자인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자가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질문39 사안의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입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동의없이 녹음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녹음된 자료를 배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녹음자료를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적 문제(명예훼손 또는 모욕)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재생하거나 또는 녹취록 형태로 입증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Q 질문40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를 정회하고 전문가의견 청취를 위한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의, 의결 그리고 종결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재개최, 재심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회한 후 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회 당시에 다음 기일을 특정하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식으로 불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회의 사유 및 다음 기일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합니다.

Q 질문4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폭행, 상해로 사안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이 경우 수사 결과 또는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 이를 반영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을 해야 하나요?

「교원지위법」은 일부 침해 유형의 경우 형사법상의 범죄 유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형사법상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는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형사 절차상의 판단을 기다려 조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원지위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Q 질문42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은 회의록을 작성한 이후에는 삭제하나요?

음성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녹음파일에는 위원들과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녹음파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 녹음파일은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Q 질문4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해교원, 침해 관련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청구 당사자 외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30조제3항).

Q 질문44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사이트의 온라인법률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질문45 보호자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부착해서 학교에 보내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있고, 보호자가 학생을 통한 무단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 질문46 보호자가 교원과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에 해당하나요?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질문47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성폭력범죄와 성적 언동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교원지위법」 제19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위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성)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교원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Q 질문48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침해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본판단 요소의 점수 합계가 0점~4점이 나온 경우에는 "조치없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참조).

Q 질문4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에서 기본 판단 요소와 추가 판단 요소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본 판단 요소]로서 1) 침해행위의 심각성은 상해, 폭행의 정도, 피해결과의 정도, 성폭력(성적 언동 제외) 행위인지 여부, 침해 학생이 2인 이상인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등 2) 침해행위의 지속성은 침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종전에 이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내용(선도조치 등)과 피해교원이 신고하지 않은 사안은 제외) 3) 침해행위의 고의성은 침해 학생이 이전에 같은 피해교원과 마찰이 있었는지, 제지나 만류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행위인지, 4) 침해 학생의 반성정도는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태도, 사안 접수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등 5)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는 피해교원과 화해(노력) 여부, 별도의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등으로 고려합니다.

[추가 판단 요소]로 1)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데 장애여부는 진단서나 행정적 자료로서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2)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침해 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단독 조치하거나 1, 2호의 조치에 부가할 수 있으며 4, 5, 6호의 조치에는 부가하여야 합니다. 추가 판단 요소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Q 질문50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내봉사(1호), 사회봉사(2호),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나요?

제1,2,4,5,6,7호 조치 간의 병과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Q 질문5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둘 다 결정할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의 법문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 질문5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점수가 [0~4]점인 경우 조치없음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3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별도의 점수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판단 요소에 의한 점수 판정 후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면서 학생 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판단 요소에 의한 점수가 [0~4]점인 경우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단독조치 할 수 있습니다.

Q 질문53 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단독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하여 받을 수 있고, 부가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질문54 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단독조치와 부가조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거법령	이수기관	보호자 참여	비고
단독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3호	학내외 전문가	필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부가 조치	1, 2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	필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선택적 부가
	4, 5, 6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	필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필수적 부가

Q 질문5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이수(치료)시간을 정해야 하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Q 질문56 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제9항).

Q 질문57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결정시 보호자 참여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여의 방법은 별도의 제한이나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보호자의 별도 교육이수, 학생 교육시 동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질문58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결정에 대하여 보호자가 미참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결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통지·안내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호자 참여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조치를 이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학교장은 90일의 다음 날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 명단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30일 이내에 참여할 것과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에는 교육장은 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교육감은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Q 질문59 제4호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므로 학생의 출결상황을 검토·파악 하여 유예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합니다.

Q 질문60 제4호 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석정지 기간의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Q 질문61 제4호 출석정지 조치 기간에 부가조치로 결정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출석정지 기간에 이루어지면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Q 질문62 침해 학생에 대하여 전·퇴학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최초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퇴학 조치를 할 수 없고, 동일교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학생의 침해행위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교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전·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Q 질문63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침해 학생이 고의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전학 조치가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제3항).

Q 질문64 침해 학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재조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제8항에 의거 동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 가중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침해 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만약 학생이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조치를 이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학교장은 90일의 다음 날 조치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Q 질문6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요?

관련법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없는 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조치 내용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Q 질문66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 이행을 유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은 학생 조치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0점~4점)을 내릴 수는 있으나 특정 조치를 결정한 이후에 그 결정된 조치의 이행만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Q 질문67 침해 학생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개사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개사과는 양심에서 우러나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강제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공개사과를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낙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어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질문68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교원지위법」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 학생이 스스로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을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 제출받아 침해 학생의 조치에 대한 판단요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Q 질문69 보호자 등이 침해자인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교원지위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교원지위법」 제35조).

Q 질문70 침해 학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치가 유보되나요?

침해 학생이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가 유보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조치가 정지됩니다.

Q 질문7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의 신고사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 교원이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으로 의결된 경우 교원은 법률이 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질문72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학생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원은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심판 또는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상 피해교원에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질문73

침해 관련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정송(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이후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판결(결정)의 취지		판결(결정) 이후 조치 내용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 아님’ 취지의 판결(결정)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 학생 조치 취소 피해교원 보호조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재개최 없이 내부결재로 가능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조치 또는 보다 강한 조치로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상 하자 제거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재개최 재개최 시 사전 통지 절차 이행 결과 통지
	조치의 적정성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조치가 과도하다는 취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원래 조치보다 강한 조치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재개최 재개최 시 사전 통지 절차 이행 결과 통지

Q 질문74

피해교원이 조정 의사(또는 침해자의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분쟁조정을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은 사안의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므로 피해교원이 분쟁조정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질문7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화해중재단’이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 진행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중 분쟁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중재단을 통한 분쟁조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개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질문76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진행 후 분쟁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됩니다. 만일 관련 당사자가 여전히 분쟁조정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의 재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질문77

피해교원과 침해자가 합의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 불이행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질문78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1. 심리 상담 및 조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상담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음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위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및 공무상 병가 신청 가능,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3.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절차와 요건에 따른 전보 요청
4. 특별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Q 질문79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관할청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즉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교원지위법」상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

Q 질문8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특별휴가 등)를 줄 수 있나요?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의 분리 및 보호가 목적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 인지(또는 발생) 즉시 사용이 적절합니다. '피해교원 회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연속적 사용이 원칙이며 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교보위 개최 전까지의 범위에서 시기나 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가능합니다. 추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특별휴가에 대한 복무는 연가나 병가로 정정해야 합니다.

Q 질문81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이 공무상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교장은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질문82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이 있나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교사로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질문83 보호조치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다만,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우선 이를 부담하고, 추후 보호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 여부는 관할청이 심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Q 질문84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수업 교체를 원하는 경우 해줄 수 있나요?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유형 중 수업 교체는 없습니다. 학급이나 수업 배정 등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및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 질문85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수사협조가 의무사항인가요?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에 근거하여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이나 수사협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경우에 수사 협조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것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기관장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의 협조라는 공익과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질문86 보호자가 교사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거부해도 되나요?

학교장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휴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급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나 학생과의 소통 방법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교원의 개인 휴대 전화를 통하여 소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기 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앱(app)이나 사무실 유선전화, 알림장 등 다양한 소통 방법 중 적절한 수단을 1개 또는 중첩적으로 택한 후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질문87 보호자가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하면 동의해야 하나요?

녹음에 대한 동의는 의무는 아니므로 동의 여부를 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질문88 학생이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 또한 배포 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게 된 배경,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보호자가 학생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및 발언을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2024.1.11. 2020도1538), 위 법 제14조제1항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은 물론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질문89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나요?

아동학대 피신고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내에 교직원법률지원팀을 통해 관계인 조사 전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제반 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총괄

- 이지명(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
- 임채숙(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자료개발

- 양성혁(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 김세희(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 노정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 정진경(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 현서희(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 안상희(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변호사)
- 임새빛(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변호사)

자료검토

- 김성례(지효초등학교 교장)
- 안주연(흥진중학교 교감)
- 송건호(양진중학교 교사)
- 이선영(덕은한강중학교 교사)

발행 2025. 2.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 본 자료집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